

또 막힌 빗물받이...또 잠긴 상습침수지역

광주 백운동·서석고 등 피해 되풀이 주민·상인 “해도 너무 한다” 분통
이 대통령 ‘एं터리 관리 뎀 문책’ 경고에도 달라진 것 별로 없어
첨단산업단지·농성지하차도 등 예방사업한 곳도 어김없이 침수
“도대체 뭘 개선했다는건지” 답답

광주 상습침수구역 주민들은 17일 쏟아진 ‘물폭탄’의 피해를 올해도 비켜가지 못했다. 올해는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하고 주의를 당부했는데도, 빗물받이가 막히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고 국비까지 지원받아 침수 피해 예방작업을 벌인 지역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 주민들은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빗물받이) 관리 엉터리로 해 수재가 발생하면 문책을 아주 세게 하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일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내린 집중호우로 상당수 상가·빌딩이 침수됐다. 이곳은 광주시 남구가 ‘침수취약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광주일보도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낙엽과 흙, 담배꽂초 등이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등 배수 시설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광주일보 6월 17일 7면>을 지적한 바 있다.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과 골목길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잠겼고 침수취약구역으로 분류된 남구 백양로 모아산부인과 일대도 물이 건물로 쳐들어왔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2년 전 하수관 관로를 더 큰 것으로 변경했지만 침수



호우 특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한 도로가 흙탕물에 잠겨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독자 제공>

피해를 막지 못했다.

불과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서구 서석고 후문 일대에서도 물이 차올랐다. 주민들은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 최대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했음에도 우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침수됐다. 동구 계림동 1091번지 일대도 비슷한 시각 도로가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다.

상습침수구역 주민들은 “관공서에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책한다고 했는데도 매번 비 올때마다 가장 먼저 침수되니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운광장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이은자(73) 씨는 “여름철이면 매년 이리다. 작년에 좀 쉰

참더니 올해는 벌써부터 이리데 장사를 하긴 글렀다”며 “비오면 물 이 들이닥칠까봐 밤에 잠을 못 잔다. 지자체는 도대체 뭘 개선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계림동의 편의점 점주 최복순(여·65)씨는 “지난 해에 1년 넘게 도로 공사를 하더니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2년 전에도 이곳 일대가 침수돼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공사를 했는데도 이러니까 더 무섭다”고 했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침수위험구역은 모두 49곳(동구 15, 남구 8, 북구 12 등)이지만 반복되는 피해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구역만 지정해놓았을 뿐 침수 예방 효과는 커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로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운데, 광장 인근 병원 앞에서 직원들이 침수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녕, 매년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 보고용’으로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상습 침수를 개선하겠다고 예방 사업을 벌인 곳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침수 피해를 입은 북구 첨단산업단지, 문흥동성당 일대, 북구청사거리 일대, 신안고 일대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침수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관리·보수를 한 지역이다.

광주시 서구 농성 지하차도도 인근 하수도 용량이 적고 하류 지역인 탓에 끊어질 않는 침수 피해를 입어 2019년 도로 기층기를 낮추는 구조 개선 작업을 벌였음에도, 이번 비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21년 농성·화정동 주민들은 서구청에 항구적 침수대책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 행진을 벌였고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침수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333일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광주시 동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최기영(52)씨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첫 타자로 피해를 입는 터라 언제 물이 넘칠지 몰라 불안한데, 구청에 상가 피해로 몇 번이고 민원을 넣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왔을 뿐이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배관공사를 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2년 전과 똑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불편 민원 전국 최고

1만명 당 민원 9.6건 접수
권익위, 분석 보고서 공개

광주가 여름철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과 관련한 불편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여름철 배수시설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리 미비로 인한 민원을 집계한 결과다.

이 기간 전국에서는 2만 604건의 민원이 접수

됐으며, 그 중 광주에서는 총 1344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건수만으로도 서울 7093건, 경기 3475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건수가 접수된 것이다. 인천 1176건, 부산 778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전남은 650건으로 8위였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로 비교할 경우, 광주는 1만명 당 9.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서울(7.6건), 대전(4.9건), 인천(3.9건), 전남(3.64건) 등이 뒤이었다.

면적 100km당 민원 건수로 비교하면, 인구가 집중돼 있는 서울(100km당 1172건)을 제외하고 광주(268건)가 가장 많았다. 대전(130건), 인천(110건), 부산(100건) 등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민원은 도로나 인도 등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 등 불편을 넘어서 안전 우려가 함께 제기된 사례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을 미리 정비해 달라거나, 빗물받이에 토사나 낙엽 등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 줄 것,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빗물받이로 교체해 줄 것 등 사고 발생에 앞서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전국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반대” 상경 투쟁 전국 농축산인들 오늘 대통령실 앞서 집회

정부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시장 추가 개방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농축산인들이 상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중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50명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쌀 구매 확대,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발하는 취지로 열린다.

농민 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또다시 농·축산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

를 내비친 것”이라며 “미국이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한·미 및 한·EU FTA 협정에 의해 상당수 농·축산물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며 “정부의 대표적인 FTA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내년에 종료되는데, 여기에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소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 보험GA협회
Korea Insurance GA Association